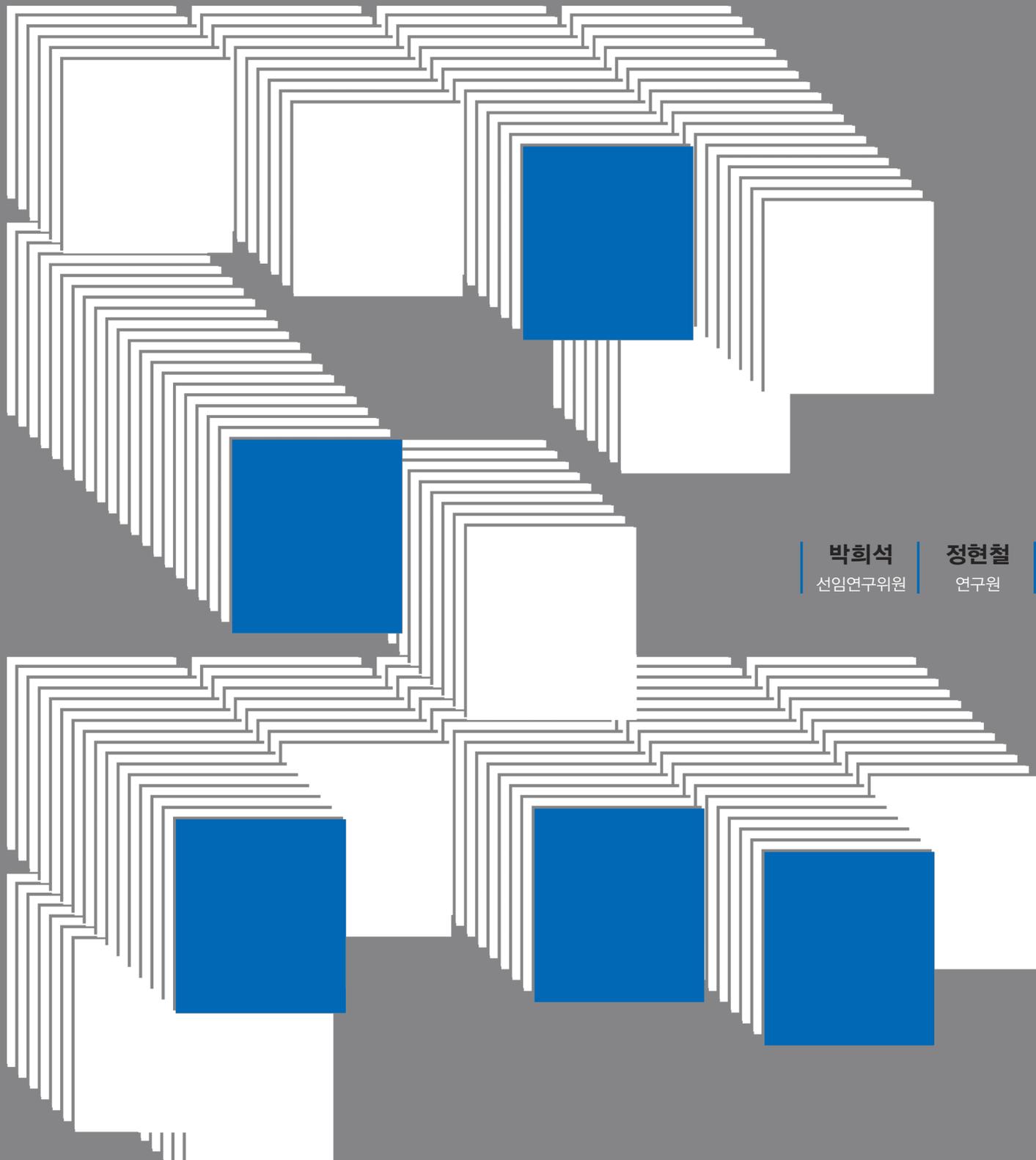


# 정책리포트

429호  
2025. 8. 18.



박희석  
선임연구위원

정현철  
연구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향



2025. 8. 18.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429호

---

##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향

박희석 선임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i.re.kr

정현철 연구원  
02-2149-1371  
geoculture@si.re.kr

요약	3
I.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4
II. 소상공인 재기 관련 제도적 기반	10
III.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재기 지원 정책	14
IV. 정책 제언	20

## 요약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에 따라 재기지원 정책의 철학이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실패 예방과 회복 기반 마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재창업 역량 강화, 경영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간 연계성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진단-맞춤형 컨설팅-재도전 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교육·멘토링 등 수단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 세계·국내 경기 둔화와 업종 집중 구조가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을 가중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되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내 성장률 역시 2024년 2.0%에서 2025년 0.8~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6.6%)보다 높은 23.2%이며, 도소매업(32.8%)과 숙박·음식점업(17.7%)에 집중돼 경기 충격에 취약하다.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으로 증가했고, 연체율도 1.88%로 상승했다. 서울 소상공인의 2025년 경기 전망은 여전히 어두우며, BSI 체감지수는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다.

###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 중앙·지방의 체계적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2020)이 제정되었으며, 경영안정·성장·재도전·사회안전망 등 종합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실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담당한다. 서울시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재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 감면, 컨설팅, 재취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폐업 이전부터 재도약까지, 선제적 개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 필요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서는 폐업 이전 단계에서 위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경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채무조정,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금융 구조 개선과 업종 전환·재취업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회복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재기를 실패 극복이 아닌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자치구 협력을 통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시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설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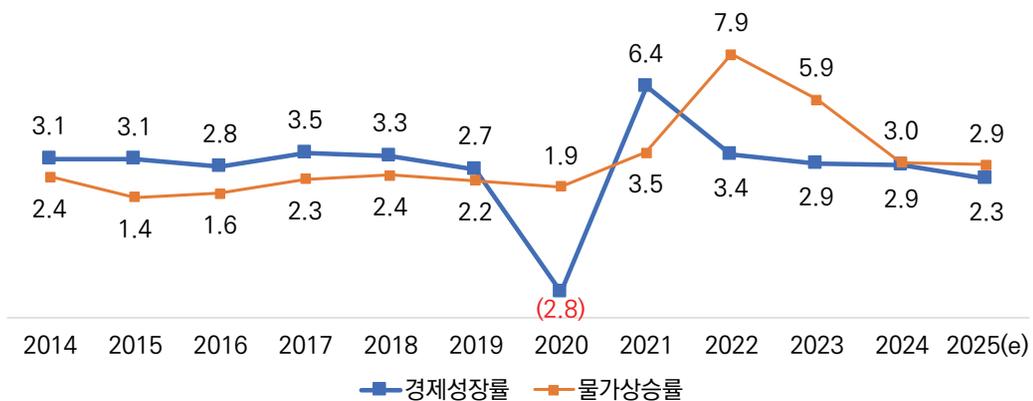
---

# I.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 I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 소상공인에게 영향

### 세계 경제는 물가 상승 추세가 완화되는 와중에 경제성장은 둔화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세계은행에서는 2025년과 2026년의 물가상승률이 평균 2.7%로 2024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국가의 서비스 물가 상승 추세는 우려<sup>1)</sup>
    - 2022년에 7.9%를 기록하였던 전 세계의 물가상승률이 2023년 5.9%, 2024년 3.0%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
    - 이러한 하락 추세가 이어져 2025년과 2026년의 물가상승률은 2.7%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
-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었던 2025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중
  - 2025년 1월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전망치는 2.3%를 기록하는 등 연초 대비 0.4%p 하락<sup>2)</sup>
    -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는 시점인 2022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3년과 2024년에는 2.9%로 감소 추세
    - 2025년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3%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친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자료: World Bank Ope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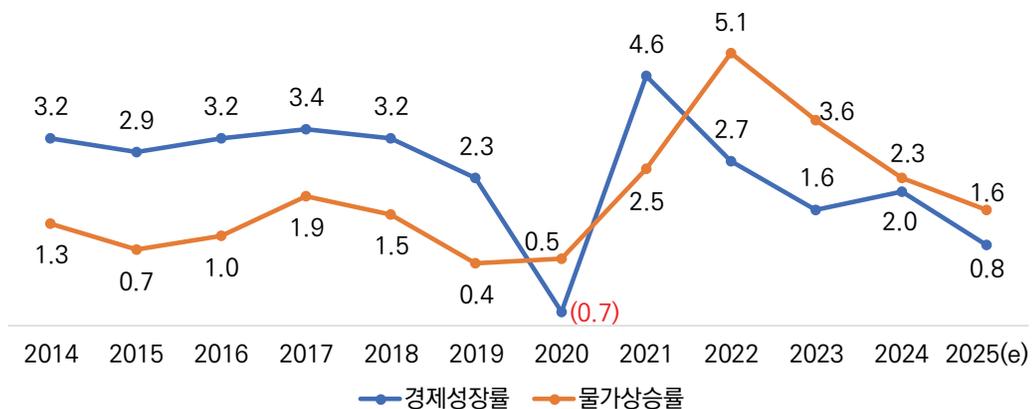
[그림 1] 2014-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1) World Bank(2025),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5』, Washington, DC: World Bank.

2) World Bank(2025),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5』, Washington, DC: World Bank.

## 국내 경제도 물가상승률은 완화, 그러나 내외부 불안 요인으로 성장은 둔화 전망

- 국내도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물가상승률은 급격히 높아졌으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 2010년대에는 1% 내외로 비교적 낮았던 국내 물가상승률은 2021년 이후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지금은 진정되어 하락 추세
    - 2010년대에는 2.0% 이내였던 국내 상승률은 2019년 0.4%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으로 2022년에는 5.1%를 기록
    -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된 2023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서 2025년에는 1.6%<sup>3)</sup>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성장 둔화 추세가 급격히 나타나는 등 우려가 큰 상황
  - 한국은 OECD 국가 중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와 함께 초과 사망률, 삶의 질, 경제지표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응을 한 국가로 평가<sup>4)</sup>
  - 국내 경제는 2025년 초반만 하더라도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
    -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0% 내외<sup>5)</sup>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이전보다 낮아져 0.8~1.2%<sup>6)</sup> 정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2025년 전망치는 KDI(2025)

[그림 2] 2014~2025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추이

3) KDI(2025), 2025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Vol.42 No.2.

4) OECD (2023), Ready for the Next Crisis? Investing in Health System Resilienc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5) OECD 2.1%, IMF 2.0%, 한국개발연구원 2.0%, 아시아개발은행 2.0%, 한국은행 1.9%

6) 한국은행 0.8%, 현대경제연구원 0.7%, KDI 0.8%, 한국금융연구원 0.8%, OECD 1.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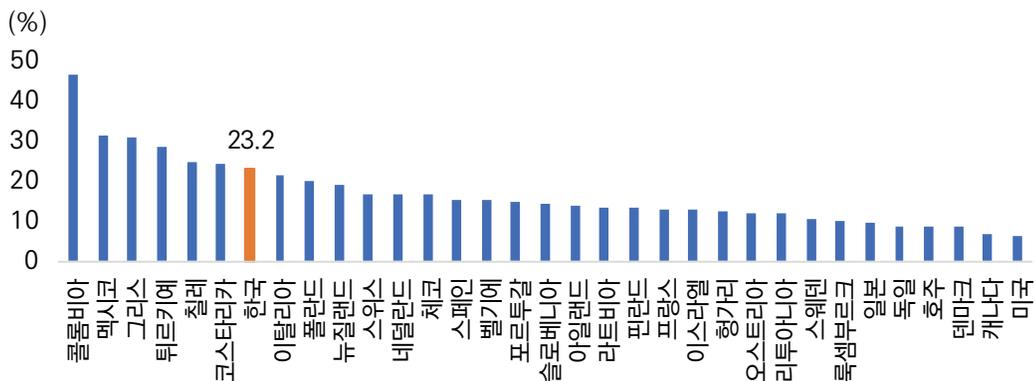
##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직결

-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 환율과 물가 상승, 경제성장률 둔화와 무역 정책 등도 소상공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
    - 환율과 물가의 상승은 원자재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높여 소비자의 소비 여력을 악화
    - 경제성장률, 무역 정책과 규제 등 거시적인 경제 환경 등도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현실
-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의 지속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에 직접적 영향
  - 지금의 대내외 경제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당분간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
  - 경제적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면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I 격한 경쟁환경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

### 한국은 경제 규모 대비 비교적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나라 중 하나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6.6%보다 6.6%p 높은 수준인 23.2%
    - 자영업 비중이 한국보다 큰 국가인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칠레, 코스타리카 등은 1인당 GDP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



자료: OECD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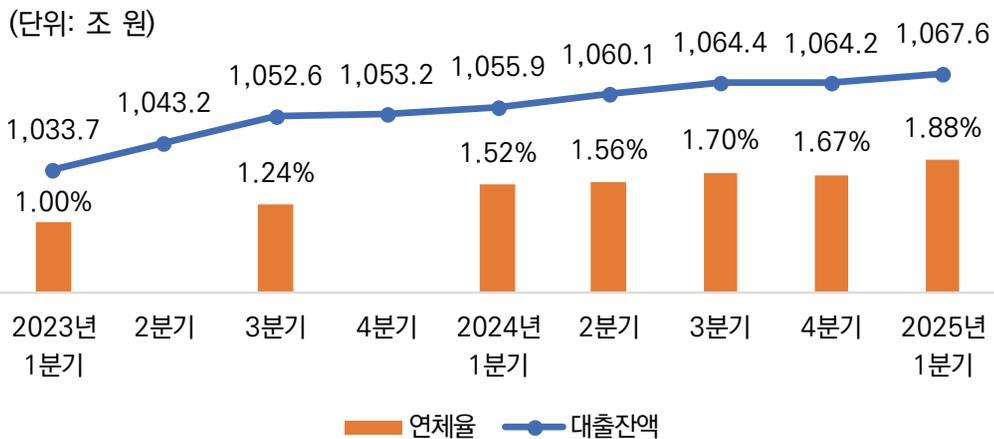
[그림 3] 2023년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 국내 소상공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정 업종에 집중

-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세는 미미하여 여전히 많은 수를 유지
  -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2020년 4,126,531개에서 2022년에는 4,124,202개로 감소(7)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사업체의 규모는 지극히 적은 것이 현실
  - 소상공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경기침체, 정책변수 변화, 경제적 충격 등에 민감하다고 평가받는 업종 중심
    - 2022년 기준 도소매업이 1,350,842개로 32.8%, 숙박 및 음식점업이 728,349개로 17.7%로 두 업종이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소상공인들의 대출액과 연체율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 전망은 어두운 상황

-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와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액은 증가하고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
  -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
    - 2023년 1분기에 1,033조 7천억 원이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5년 1분기 1,067조 6천억 원으로 증가
    - 2023년 1분기에는 1.00%였던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 2년이 지난 2025년 1분기에는 1.88%로 2년 전에 비해 0.88%p 증가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그림 4] 자영업자 대출 동향과 연체율 현황

7) 「소상공인실태조사」는 과거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단독 조사로 전환. 이로 인해 조사 모집단 기준이 기존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023년부터는 기업통계등록부라는 기업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바뀜. 그 결과 실태조사에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2년 4,124,202개에서 2023년에는 5,960,788개로 폭증. 여기서는 추세를 파악하고 자료 해석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의 자료를 활용.

## 대체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던 폐업 소상공인의 수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

- 2019년 이후 점차 감소하던 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202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
  - 전국의 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전국의 폐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9년 922,159개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867,292개였으나 2023년에는 986,487개로 증가
  - 서울의 경우는 전국보다 감소 추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 2019년에 소폭 증가를 제외하면 2016년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수가 줄어들었으나 2023년에는 급격하게 증가
    - 2016년 200,304개였던 서울의 폐업 소상공인 수는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2년에 174,257개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193,591개로 증가

## 소상공인들의 경기 전망은 어두우며, 쉽사리 폐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소상공인들의 2025년 경영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의 노력만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지수<sup>8)</sup>가 2025년 1월 이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 2025년 1월의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조사에서 체감 지수는 47.6을 기록해, 2024년 중 가장 낮았던 1월(48.1)의 수치보다도 더 하락
    - 47.6을 기록한 소상공인 BSI 지수는 2025년 1월 이후 2월 51.3 → 3월 66.5 → 4월 63.6 → 5월 70.0 등 최근에는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 이하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sup>9)</sup>를 통해서도 소상공인들은 2025년의 경기 전망을 어렵게 보고 있다는 사실 확인 가능
    -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답변은 5.0%에 불과
    - 그리고 '원자재비,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1%),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21.6%)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사업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

## 서울의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격하지만 이익이 적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서울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있으며, 대내외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대다수를 차지

8) BSI 지수(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해석

9) 중소기업중앙회, 2024, 20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2025년 정책과제 조사 보고서.

- 서울의 소상공인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으며, 대내외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다수를 차지
  -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0년 810,546개에서 2022년 770,169개로 감소<sup>10)</sup>하였으나 절대적인 수는 여전히 많은 수준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도소매업이 282,778개로 36.7%,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1,894개로 14.5%로 두 업종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서울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절대적인 규모는 큰 편
  - 2023년 기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서울의 소상공인은 53.5%이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8,300원으로 전국(60.9%, 1억 9,500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그럼에도 서울 소상공인들이 2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

10)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 II. 소상공인 재기 관련 제도적 기반

### I 소상공인 지원, 법률과 체계는 마련

####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과거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초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지원법이 제정
  -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 이후 1997년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소기업과 유통산업의 경영 안정과 균형 발전을 도모
- 점차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
  - 2000년대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개별적 지원체계가 구축
  - 2010년대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 더욱 구체화

[표 1] 소상공인 관련 법제 현황

명칭	제정일자	제정 목적
중소기업기본법	1966.12.6	- 중소기업의 위상과 정책 방향 규정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4.10	- 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활동 지원
유통산업발전법	1997.4.10	- 유통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균형 발전 도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0.12.29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구조개선 지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3.7.30	-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균형 성장 촉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2012.1.26	- 협동조합 활동 촉진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기여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4.5.28	- 도시형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8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6.1.28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 및 활성화 촉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18.1.28	-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영 안정 도모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7.27	- 지역 상권의 상생과 자생적 운영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의 기반이 되는 법률

- 2020년에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참여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제도 시행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
  -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이 목표
  -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
-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특징
  -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및 재기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 부담 완화, 디지털 경쟁력 제고,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

[표 2] 소상공인 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의	-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5~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규정
경영안정 지원	- 금융지원, 보증지원, 비용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경영 유도
성장 지원	-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성장단계에 맞춘 기업화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재기지원 강화	- 폐업 고려 또는 이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취업·재창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구축	-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 대비 위한 고용보험, 공제제도 가입 지원 등 사회적 보호장치 확대
비용부담 완화	- 주요 운영비용인 임대료, 전기료, 배달료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 경감
디지털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디지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지원체계 구축	- 정책 안내 및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통합

## 소상공인 관련 법제는 진흥과 보호로 구분

- 소상공인의 진흥 관련 개별법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협동조합기본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
  -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생력과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
- 보호 관련 개별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
  -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
  -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생계형 업종 보호 등이 주요 목적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목적

[표 3] 소상공인 관련 법제 구분

성격	법률	제정일	소관부처	
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2020.02.04.	중소벤처기업부	
개별법	진흥	전통시장 및 상점이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9.12.30.	중소벤처기업부
		협동조합기본법	2012.01.26.	기획재정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4.05.2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01.28.	중소벤처기업부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1997.04.10.	산업통상자원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1.12.29.	법무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촉진법」	2006.03.0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	2018.06.1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1.07.27.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한국·중국·일본의 소상공인 법제에 관한 고찰(2024, 법학 논고)

## I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를 위한 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업무를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하며,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 안정, 재기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
    - 부처 내에서 재기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이며,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 소상공인 관련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 시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담당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성과 분석과 정책 개발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 담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창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재기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 업무 수행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

[표 4]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분	기관	역할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에서 재기지원 사업 담당 -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도약 지원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운영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성과 분석과 정책 개발을 통한 과학적·효과적 지원 방안 마련
정책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 - 경영환경 개선, 창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재기 프로그램 운영 등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제공을 통해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며 지역별 유사한 정책 시행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지원**

- 서울시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서울시청의 소상공인정책과가 총괄하며, 각 구청은 지역 밀착 업무를 담당
  -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과는 서울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기획과 실행을 총괄하며, 창업 지원, 경영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
  - 각 구청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창업 지원, 상권 활성화, 홍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사업 운영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재기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기관
  - 재기지원부는 사업 실패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저금리 대출, 보증료 지원)과 비금융 지원(교육, 경영 컨설팅)을 비롯하여 채무감면과 채권 소각을 진행
  - 자영업지원센터는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교육,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

[표 5]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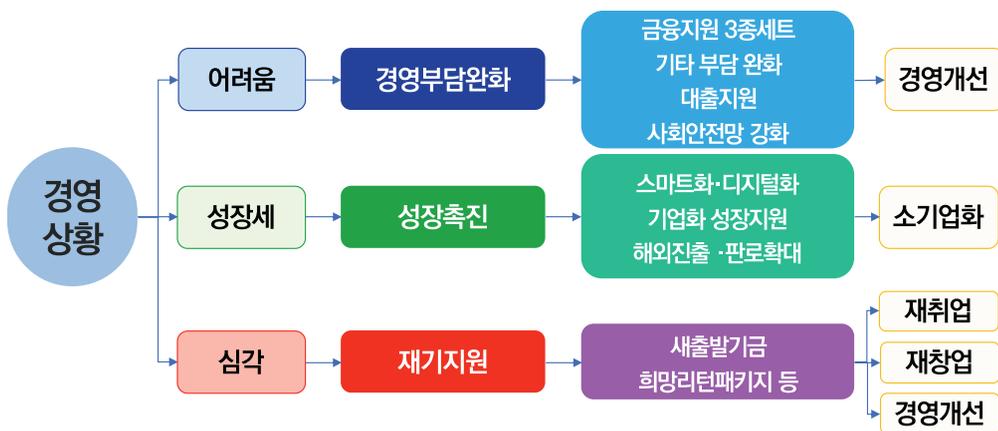
구분	기관	역할
총괄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과	- 서울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기획과 실행을 총괄 - 창업 지원, 경영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 제시
정책시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부	- 사업 실패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 - 채무 감면과 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사업 수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돕는 실질적 지원 수행 -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교육, 맞춤형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
	서울시 소속 자치구	-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지원 업무를 수행 - 창업 지원, 상권 활성화, 홍보 등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사업

### Ⅲ.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재기 지원 정책

#### Ⅰ 중앙정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재기지원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2024년 7월 3일 발표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지원, 재기 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설계했다는 것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성장 지원, 재기 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
    -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하여 기타 비용 지원, 대출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
    - 성장세에 있는 소상공인은 성장 촉진을 위해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기업화 성장 지원,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
    - 심각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과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채무조정과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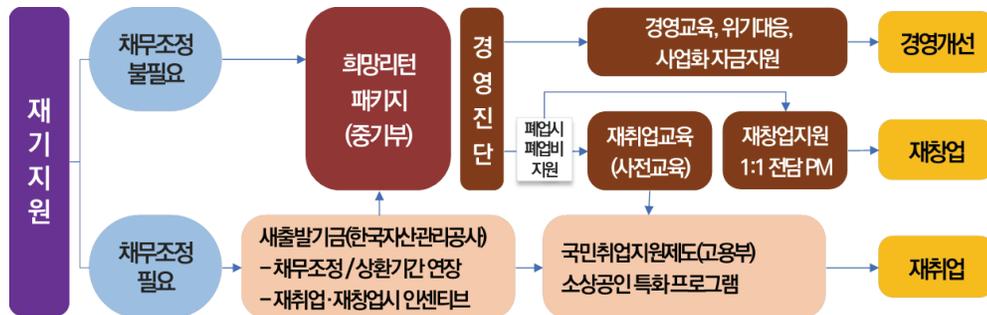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희망 프로젝트"(2024.7.3.)

[그림 5]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의 방향을 경영개선·재창업·재취업 중 하나로 결정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에서는 경영 위기 발생 초기부터 폐업 후 단계까지 세밀하게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설계
  - 폐업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이라는 기존의 접근방식을 뛰어넘어 폐업 이전과 이후에도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특징

-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경영 개선, 재창업, 재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재개를 돕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자 목적
  -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과 상환기간 연장을 진행한 후 지원되며,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계속 사업의 유무가 결정되면 지원의 방향이 결정
    - 경영진단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컨설팅·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
    - 경영진단 결과 폐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재창업·재취업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운영
  -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지원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제공
    - 재취업을 희망한다면 1:1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배정받아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교육을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새출발희망 프로젝트”(2024.7.3.)

[그림 6]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중 재기지원 관련 내용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

-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창업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조성
  - 2022년 10월 4일 시행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 및 금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
- 2024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지속되고, 여전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2026년 말까지 연장
  -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와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는 원금의 최대 80% 감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최대 20년) 등이 지원되며,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이 적용

# I 서울시는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을 강화

##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

- 서울시는 2024년 11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
  -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담 완화, 매출 증대,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기 지원 등 4대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 정책
    -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제공, 안심금융과 신속특례보증을 통해 대상자 확대 지원
    -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 사용처 확대, 서울페이+ 서비스 활성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가맹점 지원 등을 추진
    -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확대 등 추진
    - 재기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과 재도약을 지원, 위기 소상공인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공정거래·사회안전망·재도전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기를 돕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
    -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실질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

내 손안에 서울

동행·마력  
특별서울

**서울특별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그림 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전환과 재기 지원 강화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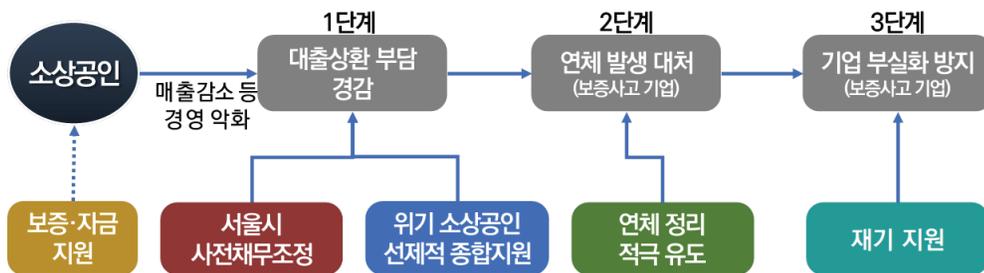
- 서울시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법률·행정 컨설팅, 점포 철거 및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폐업 이후에도 전직 및 재취업 지원체계를 마련
    - 단순한 폐업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
  - ‘폐업 소상공인 전직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교육 연계, 일경험 제공, 공공 및 민간 일자리 매칭을 추진
    - 마인드셋 교육과 취업상담을 병행하여 맞춤형 전환을 지원하며, 기술 교육원과 연계하여 전기, 실내 인테리어, 용접, 공조냉동 등 취업률이 높은 기술 직업 교육을 제공
    - 일정 기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생계유지형 공공 일자리 및 민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과 신용등급 하락 사업자 대상의 맞춤형 사업 정리·회생 컨설팅과 비용을 지원 확대
    - 신용등급 3~5등급 소상공인의 경우 6개월 이내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면 경영위기 알람을 제공하고, 사업 정리 솔루션 및 최대 3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 서울시는 ‘신속·간편·장기·저리’ 금융지원을 시행

- 2025년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특징은 저신용·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 것으로 신속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이 특징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간편·장기·저리’ 자금지원 정책을 추진
    -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와 특화 자금 공급 확대를 목표로 2025년에는 총 2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
    - 2조 1천억 원 중 1조 9천억 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용자로 지원하며, 2천억 원은 특별보증 형태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
  - 안심통장 제도의 도입과 비상경제회복자금 신설을 통해 신속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매출 급감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
    - 특별보증자금은 안심통장을 위해 공급하는 것으로, 안심통장은 서울시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금융지원
    - 비상경제회복자금은 위기 대응형 재정지원을 통해 폐업의 방지와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부실방지와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관리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전 부실을 방지하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대처
  - 단계별 지원은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연체 발생 예방, 재기 지원 등의 종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단계에서는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사전채무조정과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종합지원을 시행
    - 2단계에서는 연체가 발생하여 보증사고가 난 소상공인들에게 연체 정리를 적극 유도
    - 연체 정리를 적극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기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돕는 체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자료

[그림 8] 서울시 소상공인 채무관리 구조

## 재기 지원 방향의 전환, 폐업을 새로운 경제활동 전환 과정으로 인식

-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폐업을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을 의미
  - 과거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서 재도전기 지원사업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다시서기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
    - 이러한 정책은 위기 소상공인의 조기 발굴과 폐업 지원,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복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업 이후의 대응에 초점
  - 2025년에는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은 ‘새 길 여는 폐업지원’으로 대체하여 소상공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은 경영개선 또는 폐업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폐업 이후의 기회를 찾아주는 것에 집중한다는 차이
    -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업종 전환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

## I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기지원 정책, 개선 필요

### 정부와 서울시는 폐업을 새로운 경제활동의 전환으로 인식하는 정책 철학을 공유

- 정부와 서울시 모두 소상공인의 폐업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재창업이나 재취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경로로 인식
  - 과거에는 소상공인의 폐업을 개인의 실패나 생계 단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재창업·재취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경로로 인식
  - 이에 따라 사전 진단, 맞춤형 컨설팅, 심리 회복, 직업 전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의 수단을 통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 소상공인 폐업지원 정책 관련 철학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정책 시행 방안은 차별화

-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재무 건전화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범위가 전국 단위로 설계되어 정책의 정형화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
  -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감면·조정을 적용해 맞춤형 대응에 한계
  - 전국 단위로 통일된 절차와 조건을 적용하여 제도 운용의 정형성이 높고, 지역별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
- 서울시는 '힘보탬 프로젝트'를 통해 전직·기술교육·공공일자리 등 현실적인 전환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치구와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밀착형 지원 시스템을 구성 중
  - 서울시는 전직 지원, 기술교육, 공공일자리 연계를 통해 폐업 이후 실질적인 경제활동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지원은 일회성에 그쳐 지속성 확보에는 한계
  - 자치구·민간 협력 기반의 지역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체계적 연계와 성과 관리 측면에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

### 중앙-지방 간 역할 불분명, 중복 지원, 획일적 지원 방식, 폐업 이후 중심 대응 등은 한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서, 재기지원 제도 전반에서 중복된 지원과 공백 발생 우려가 상존
  -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지원이 반복되는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 현행 소상공인 지원체계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며, 폐업 이후의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업종·규모·위기단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와 영업 지속 단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결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정책 운용상의 보완이 필요

## IV. 정책 제언

### I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경영개선과 재시작 아울러야

####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체계의 고도화·효율화 필요

- 실패 예방과 지속 성장 중심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향성 전환
  -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와 현장답사 등을 바탕으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업 운영 역량 강화 등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
- 소상공인 재기의 핵심인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채무조정과 단순 자금 제공을 넘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목적별 금융지원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 소상공인의 폐업을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
  - 재취업 교육, 직업 전환 컨설팅,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재기 지원 정책의 접근성 강화
  -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센터 등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기 지원 정책 관련 정보 제공
  - 온라인 플랫폼 연계,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지원제도 홍보 강화 및 정책 접근성 향상 유도

####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실패 예방과 지속 성장 중심의 지원 정책 마련	- 소상공인 데이터와 현장답사를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발굴 시스템 구축 - 실패 원인 분석 후 맞춤형 컨설팅과 재창업 역량 강화를 활용해 경영 개선 지원
소상공인 재기 관련 금융지원 효율성 제고	- 채무조정을 비롯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맞춤형으로 개선 - 목적별 금융지원을 세분화하여 사업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 폐업을 출구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	- 재창업, 재취업 교육, 직업 전환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효과적인 재기 지원모델 마련
재기 지원 정책의 접근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 온라인 플랫폼, 자치구 협력 기반 마련 등 적극적 홍보시스템 구축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사전상담·컨설팅 강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 I 재기 지원의 방향을 실패 예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 소상공인 데이터와 현장답사를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발굴 시스템 구축

- 재기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밀한 발굴 시스템이 선행
  -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있지만, 데이터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한계
  - 실제 경영상 위기나 당사자의 체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 개입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
- 기존의 정량적 진단 방식에 더해 현장 방문, 인터뷰, 생활권 내 상황 평가 등의 정성적 접근을 병행한 입체적 발굴 체계를 마련
  -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시점에 금융, 컨설팅, 교육 등의 맞춤형 정책 수단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 특히 폐업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정책 철학을 확고히 함으로써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예방과 회복 중심의 체계를 강화

### 실패 원인 분석 후 맞춤형 컨설팅과 재창업 역량 강화를 활용해 경영 개선 지원

- 재기 지원은 단순한 재도전 기회의 제공을 넘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
  - 서울시의 기존 정책은 자금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 재창업 중심의 단편적 접근이 많았으나,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입을 설계하는 것이 재기 성공의 핵심
  - 사업 실패의 원인이 외부 환경인지, 내부 경영 요인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며, 이를 진단하는 체계 마련이 정책 설계에 전제가 되어야 효과 극대화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속적 멘토링, 경영 개선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
  -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역량 강화 교육, 업종 전환 전략 지원, 현장 중심 실무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재기의 기반 마련
  - 구조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문제의 원인에 따라 분화된 차별화된 재기 지원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I 재기 관련 금융지원의 효율성 제고

### 채무조정을 비롯하여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개선

- 단순한 자금 투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실현할 수 없으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금융지원을 설계하는 정밀한 접근이 요구
  - 채무 부담이 누적된 소상공인에게는 상환 조건 완화나 이자율 인하와 같은 조치가 단기적 회복의 실질적인 발판으로 작용 가능
  - 채무조정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정상적 경영 복귀를 유도하는 구조적 조정 수단으로 작동
- 채무조정은 획일적 감면보다 개별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과 사업 회복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정 조정 방식으로 설계 필요
  - 이자율 인하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면 소상공인은 회복 기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가능
  - 결과적으로 단기 연체를 장기 부실로 전이시키지 않고,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적 개입으로 기능

### 목적별 금융지원을 세분화하여 사업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자금지원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
  - 운영자금은 단기 생존을, 시설자금은 중장기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두 방식 모두 실패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
  - 성공적인 금융지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진단과 연계된 전략적 재기 인프라 구축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

## I 폐업을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출구’라는 관점에서 접근

### 재창업, 재취업 교육, 직업 전환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폐업은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
  - 현재 재기 지원 정책은 주로 재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일부는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생활 유지와 회복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

## 금융·교육·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효과적인 재기 지원모델 마련

- 재취업 교육, 직업 전환 컨설팅,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등의 지원 강화 필요
  -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새로운 경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정적 위기를 넘는 것을 넘어 경제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
  - 특히 폐업 직후의 심리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도전 중심뿐 아니라 전환 중심의 정책 설계가 병행

## I 재기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접근성 향상 유도

### 온라인 플랫폼, 자치구 협력 기반 마련 등 적극적 홍보시스템 구축

- 정책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재기 지원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므로, 홍보 체계의 강화가 반드시 병행
  - 전국적으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부족과 정보 미노출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
-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지원제도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 기반의 다채널 홍보체계를 마련
  - 홈페이지, 문자 안내,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뿐 아니라 SNS, 포털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다중 접점 전략이 필요
  - 정책을 알리는 방식부터 쉽고 명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 정책 접근성과 체감 효과가 향상되어 재기 지원제도의 실질적 이용률과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결과로 연결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사전상담·컨설팅 강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 재기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
  - 최근 실태조사에서 폐업 시 정부의 재기지원 제도(예: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8.2%(중소기업중앙회, 2025)
  - 재기 지원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이 낮아 실질적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일자리센터 등 기존 기관을 연계하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1:1 맞춤형 사전상담과 컨설팅을 확대
  - 각종 재기 지원제도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 개선

정책  
리포트

제429호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향

발행인 오균

편집인 백선희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5년 8월 18일

디자인 박진범

인쇄·제본 세일포커스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